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책적 의미

박희봉*·유시용**·유동상***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국립극장 법인화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인화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 전·후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법인화 과정에서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공익성 유지, 소속 구성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법인화의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법인화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맹점을 보완하였다. 즉 법인화가 합리성이 높다고 해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인화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비용-편익분석 상의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연구의 실질적 유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즉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의 현실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감원이 없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증가시키며, 기관의 공공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였다.

국립중앙극장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안별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다. 다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순현재가치를 계산한 결과, 법인화(대안2)의 순현재가치가 현상태(대안1)의 순현재가치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을 수용한 상태에서는 국립중앙극장은 법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법인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성과향상을 추진한다면 법인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법인화, 비용편익분석,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서론

법인화는 정부소속기관이 공공적 성격의 민간기관으로 바뀌는 것으로서 기관의 법적 위상이 특수법인(혹은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고, 운영 원리가 공적 운영관리에서 사적 시장주의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법인화를 기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짐으로써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증진하려는 공공기관 개혁 노력을 강조한다. 반면, 법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법인화를 민영화의 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정부기능·조직운영 및 관리를 시장경제 하에서 민간주도의 관리로 전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하는 것(박석희, 2010)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법인화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법인화 찬성론자는 법인화를 민간의 자율적 경영기법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유지·발전시키려는 것을 강조한다. 법인화 찬성론자는 조직관리상에 있어서 정부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운영이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조직 및 인사상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법인화는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조직관리와 전문인력의 채용 등을 통한 인사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음을 강조한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소속기관은 국가재정법 등에 의해 그 예산이 엄격하게 관리되던 정부소속기관을 법인화를 통해 예산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적극 보강함과 동시에 인건비, 성과상여금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 따라 운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즉 법인화는 이러한 조직, 인사, 예산상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 방식을 개선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인화 반대론자는 법인화 자체에 회의적이다. 우선 법인화는 법적 책임성을 약화시켜 공익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인화로 인해 부여된 기관의 자율성은 수익성과 단기적 효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달성과 공익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박석희, 2010). 특히 법인화 대상 조직소속 공무원들은 법인화의 목표가 정부기관의 축소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속기관의 법인화 이후 변화하게 될 신분 문제에 의해 법인화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법인화 과정에서 많은 절차상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인화 자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는 공공부문 선진화의 한 방안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에 대한 법인화 의지를 밝혔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 분야 연구기관의 법인화 추진은 1990년 법인화된 한국해양연구원의 성과와 일본 산림총합연구소와 수산총합연구소의 법인화가 자극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사례에 있어서도 반대론자들은(이종원 외, 2010) 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은 서비스 특성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과 일본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미국, 태나나,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기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유사한 연구기관의 법인화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이유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두 기관의 법인화에 따른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에 따른 쟁점을 정리하여 이들 기관이 법인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각종 쟁점을 정리할 것이다. 법인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법인화의 전제를 수용하여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상태와 법인화 이후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것이다. 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법인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공익성 유지, 소속 구성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법인화의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법인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따른 비용-편익분석만으로 정책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법인화 비용-편익분석이 의미하는 바를 논의함으로써 법인화 성공을 위한 정책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법인화로 인해 조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고, 법인화 반대 입장을 고려하면서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법인화의 실질적 유효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II. 국립산림과학원/수산과학원 법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법인화 찬성론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 법인화가 추진되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일본의 산림연구기관이 독립행정법인화가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산림연구기관 독립행정법인화 이후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구성원의 업무성과 및 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직장의 안전환경관리의 향상, 재량 노동제나 플렉스타임제 시행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평가되고 있다(이종원 외, 2010).

실질적인 법인화 이유는 기존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라는 측면이 강하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이 조직운영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의 조직운영 형태보다 법인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성로(2007)은 법인화 추진 이유를 관료제조직에 대한 비판에서 찾고 있다. 즉 공공부문에는 민간부문보다 능률향상의 요인이 되는 경쟁이 부족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사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미약하며, 관료는 사기업보다 자의적 행태를 취할 기회가 더 커서 정부자산 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개인적 편익이나 권한 증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인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 탄력성 상실, 법적·정치적 자율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필동(2008)은 법인화의 이유를 국제경쟁력 강화에서 찾고 있다. 박희봉(2007)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화 된 조직의 경우 인사 및 재정운영의 독립적 책임이 많이 향상되기는 하나 근본적인 조직 및 예산운영 면에 있어서는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수산과학원은 연구기관으로 갖추어야 될 자율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관장에게도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행정직들 역시 소신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가 필요한 이유는 ①조직 및 인력 운영, ② 예산관리, ③ 기관운영의 효율성 등 내부 운영 측면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정부소속기관과 특수법인은 법적 근거가 다르다. 정부소속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조직되는 정부기관이며, 행정안전부에 의해 조직과 정원이 통제받는다. 반면, 특수법인은 개별법에 의해 조직이 형성되는 까닭에 행정안전부에 의해 조직과 정원관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정부소속기관의 구성원은 신분이 공무원이고, 특수법인의 경우는 민간인 신분이다. 이러한 조직과 인사상의 차이는 조직 및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정부의 조직 및 인력의 운영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조직·인사상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내·외 산림 및 수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조직관리와 보수의 현실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조직 및 인사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로써 조직구조의 개편 및 슬림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조직구성과 우수 연구 인력의 적극적 채용을 통한 기관의 연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임·수산업 관련 전공자뿐만 아닌 다양한 경쟁적·사업적 성격의 전공분야의 채용을 통해 연구 인력의 다원화와 이를 통한 연구 사업의 경제성 향상. 이는 과학원의 경쟁력 증진으로 연계될 수 있고, 연구 인력의 직급체계 세분화를 통해 연구 성과와 연구 경력에 적절한 승진과 연봉인상기회 증진, 연구원들의 경쟁 유발과 이로 인한 연구몰입과 연계되어 과학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해양연구원 등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기관 운영 형태의 전환이후 총 연구인력 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는 없으나 보수수준의 향상과 인사적체 현상의 해소

등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연구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정부소속기관은 소속된 정부기관의 엄격한 재정통제를 받는 반면, 특수법인인 기획재정부의 포괄적인 통제를 받는다. 정부소속기관은 국가재정법 등에 의해 그 예산이 엄격하게 관리됨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에 제약 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화 찬성론자들은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수산과학원의 예산운영의 자율성확보가 필요한 점을 법인화 이유로 드는 것이다.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다 원화와 경쟁력 확보, 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하여 자체세원을 증가할 수 있 고, 또한 연구 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적정화, 정부 정책자료 제공이나 자문 등의 유료 화 등을 통해 수입의 증대가 예상될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산·회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환경· 선호에 대한 대응성과 민감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구원들의 연구대상과 주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의 경직성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 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거의 100%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연구원의 수입증 대는 정부보조금의 감소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세금부담의 감소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 다. 현재 일본의 산림총합연구소나 수산총합연구소의 경우에도 법인화 이후 재정자립도가 상승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고 있다.

정부소속기관으로서의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은 소속정부기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아 운 영되고, 법적 책임 역시 소속정부기관이 소유한다. 따라서 법인화 이전의 연구기관의 손실이 발 생한 경우 소속정부기관이 보전해준다. 반면, 법인화 이후의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은 자율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대신 최종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직접 지게 되어 있다. 즉 국립산 립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최종 생산물은 연구논문과 연구과제 그리고 다양한 특허나 기술의 출원이라 할 수 있다. 연구원 간의 경쟁 체제는 연구원들의 연구 몰입 효과를 가져 오고 이에 따라 연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법인화를 통한 연구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예산의 증가는 연구원 임금의 상승과 다양한 성과급의 제공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연구원 들에게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 또한 두 기관의 소비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새로운 연구 과제 의 발굴이 나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 진작을 통해 연구의 생산성 증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표 7> 정부소속기관과 특수법인의 비교

	정부소속기관	특수법인
조직관리부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조직형태 (법적근거)	·정부기관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등 (개별법)
구성원 신분	·공무원	·민간인
재정·회계 통계기관 및 자율성	·소속 정부기관의 통제 ·세입, 세출 모두 국가예산	·기획재정부 통제 ·수입의 일정부분은 정부 보전.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자율책임.
책임성	·운영의 정부통제	·감사, 경영평가 등에 의한 간접적 정부개입
	·손실 발생은 정부보전	·손실 발생은 기관 책임. 파산까지 가지 않음
	·경영공시 의무 없음	·경영공시 의무

출처: 박용성 외(2008), 유홍림(2009) 참고

따라서 연구기관의 법인화 찬성론자는 외부 환경과의 경쟁에 의한 효율성의 증진과 내부 조직 운영 면에서의 탄력적 측면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은 외부경쟁이 낮은 반면 민간부문은 외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한다. 민간부문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익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이나 합병 등의 위협에 직면하는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이 없고, 이는 기관의 능률향상의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이성로, 2007). 공공부문은 완전 혹은 부분 독점에 의해 보호되고, 업무방식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기관과 경쟁할 이유가 없는 반면, 민간부문은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와 국내·외적 환경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른 조직보다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수산과학원의 경우 책임 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법령을 기초로 수행되어지기 때문에 외부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이나 국립수산과학원 조직의 관료제적 운영체제 하에서는 국내·외의 산림 및 수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구 인력의 다원화나 이를 통한 연구 사업의 경제성 향상 등이 보고와 지시라는 관료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두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몰입을 통한 연구의 생산성 향상이 저해를 받고 있고, 인력순환의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인력 유입의 기회 상실이나 연구의 태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예산 운용의 경직

성으로 인한 환경변화 대처에 미흡한 점 등이 비판받고 있다.

2. 법인화 반대론

현실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 반대론자들은 법인화 찬성론의 견해와 같은 차원에서 반대 또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일본 산림연구기관의 법인화 장점에 맞서서 일본을 제외한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만이 유일하게 독립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종원 외, 2010). 또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법인화의 장점을 주로 부각시키는 반면, 법인화 대상기관의 이해당사자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농촌진흥청, 농림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는 내부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부각하고 있다(박석희, 2010). 또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법인화의 장점도 인정하면서도 대상기관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신중론이 대부분이다(박석희, 2010; 이종원 외, 2010; 이성로, 2007; 김필동, 2008; 조장균, 2005).

구체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 반대 입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수산과학원이 법인화될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화의 장점이 예상대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현재 두 기관이 국가의 기초학문의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공익성에 크게 문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림연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공공성이 크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의 연구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산림재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산림행태계의 기능과 산림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종원 외, 2010). 또한 농·산림업분야가 법인화되면 그 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종자, 재배 및 병해충 방제기술 등 모든 기술분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여 기술료 상승에 따른 농가 실질소득 감소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공공성을 저해하고 기관의 공적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박석희, 2010).

다음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반대의 입장이 분명하다. 법인화가 되는 경우 연구 인력의 민간인 신분전환에 따른 신분불안으로 인해 우수 연구 인력을 대학이나 타 기관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업 안정성이 법인화 이후 신분변화가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인가 예측하기 어렵고, 법인화 이후 우수 연구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신분 안정성의 훼손으로 인해 우수인력은 유출되는 반면 두 연구기관이 요구하는 인력의 영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 임업에 대한 상황조사, 정부대표로서 국제대회 참가, 국제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때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결국 국익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법인화 대상 공무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또한 예산관리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법인화는 곧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단기성 수익사업에 치중하여야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장기적·기초적 사업을 외면하고 단기적·수익적인 수탁과제를 늘림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산림 및 수산관련 사업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 이외의 기관의 주요기능인 대 주민 서비스 제공의 유료화 등으로 인한 공익성의 저해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나친 연구의 경쟁력 강화나 연구 효율성 증진은 연구 과제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수탁과제 등을 통한 지나친 소비자 선호에 맞는 연구 개발에 집중할 경우 연구원의 존립목적인 산림·수산 연구 등의 기초 연구 소홀로 국가의 기초연구지식의 축적이 저해되는 등 공공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박석희, 2010; 이종원 외, 2010).

3. 법인화 논점

그렇다면 어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법인화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상철 외(2005)는 법인화를 포함한 민영화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더라도 정부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효율화와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였다. 유흥림(2009)은 법인화 대상기관으로, 첫째 시대적 상황이 설립 당시와 달라져 설립목적으로 달성했거나 정부기관보다 민간부문이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국립의료원 등), 둘째 전문직의 신분보장으로 경쟁력을 가진 인력확보가 곤란한 기관(국립현대미술관 등), 셋째 민간이양 반대 명분이 적고 이양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기관, 넷째 민간부문에서도 유사한 서비스 기능이 있어서 정부기관의 서비스의 수준과 극명히 대비되는 기관(경찰병원 등), 다섯째 유사 공공기관의 벤치마킹이 가능한 성공적 경험이 있는 기관, 여섯째 민간이양방식이 충분히 연구되었고 저항의 종류와 강도 등을 예상하여 사전 대책마련이 가능한 기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박용성 외(2008: 84-85)는 법인화 대상기능은 일정한 자원·인력 확보로 독립적 조직운영이 가능한 분야,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가 서비스 공급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 민간의 전문성·기업 경영방식 도입이 가능한 분야, 대국민 집행기관 중 비공권력적 서비스 분야, 법인화 이후 지속적·효과적 성과관리가 가능한 분야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민영화 대상기능으로 민간부문과 경쟁·중복·유사 기능, 자체재원으로 재정자립 가능 분야, 비규제·비정책 기능수행 분야, 민간부문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필요 분야, 고객 형평성·공정성 보장에 영향이 없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의 기준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물과학원을 법인화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인화에 있어서 조직의 자율성 부여에 따라 행정능률성이 제고

되고, 법인화 이후 구성원의 신분이 안정적일 필요가 있으며,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법인화 목적을 어떻게 충실하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을 법인화 한다면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발생한다. 따라서 예상 가능한 단점은 최소화하고 법인화의 장점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인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수산과학원의 설립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초적인 학문으로서 산림과학이나 수산과학의 지식 및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두 기관이 법인화가 된다면 이러한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기관이 공익법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련의 기초학문 배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조치 마련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 운영의 지나친 경제적 접근은 필요가 있다. 조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앞서 지적한 공익성의 일부 훼손이 수반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기관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인 국가의 재정보조가 필요하다. 법인화로 전환된 이후 갑작스러운 국고보조금의 감축은 자연스럽게 두 기관이 위탁사업이나 수익성 연구 사업에 몰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고 이는 곧 장기적·기초적일 수밖에 없는 기초학문연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법인화 이후 두 기관의 운영이 정상화 및 효율성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정보조의 증액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수산과학원의 연구 및 행정 인력은 법인화 이후에도 신분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법인화가 된다면 구성원의 신분이 불안해 진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신분의 불안은 법인화 작업 자체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중요한 고급 인력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정책과학학회, 2009). 이러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분전환의 단계적 전환¹⁾이나 구성원의 인금인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법인화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1) 실제로 일본의 산림종합연구소나 수산종합연구소의 경우 구성원의 신분을 5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성원의 신분불안으로 인한 반발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Ⅲ. 국립산림과학원/수산과학원 현황

국립산림과학원은 임업 및 임학에 관한 시험연구를 통해 산림과학 지식 및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1949년 2월 농림부 산하 임업시험장으로 출발하였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자원의 조사·시험·연구와 수산 기술의 개발·지도·보급, 어업자원의 관리·보존 등을 목적으로 1921년 창설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01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은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9년 말 현재 3부 1센터 18과 3연구소의 조직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직 196명 등 총 27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국립수산과학원은 2009년 말 현재 3부 3단 12과 3센터 6연구소의 조직체제로 구성되어 연구직 313명 등 총 601명이 종사하고 있다.

〈표 1〉 2000-2009 국립산림과학원의 직급별 인원수 변화

(단위: 명)

연도	계	계약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관)	연구직 (연구사)	기능직
2000	308		68	56	137	84
2001	314	1	55	63	128	67
2002	314	1	55	63	128	67
2003	320	1	56	64	132	67
2005	293	1	32	66	136	58
2006	303	1	32	70	142	58
2007	307	1	32	72	144	58
2008	284	1	27	67	135	54
2009	277	1	26	63*	133	54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연보(2009, 국립산림과학원). * 연구관은 100% 99년 이전에 채용된 연구 인력임.

〈표 2〉 2000-2009 국립수산과학원의 직급별 인원수 변화

(단위: 명)

연도	계	계약직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2000	658	0	133	285	2	238
2002	668	0	134	293	2	239
2004	648	0	130	297	0	221
2005	650	1	130	298	0	221
2006	627	1	109	307	0	210
2007	633	1	109	313	0	210
2008	633	1	109	313	0	210
2009	601	1	106	313	0	183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연보(2009, 국립수산과학원).

또한 두 기관의 비정규직의 분포를 살펴보면, 국립산림과학원은 2009년 현재 약 222명(44%),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은 574명(97%)의 비정규직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²⁾. 연구 인력의 연봉과 승진 구조도 특징적이다. 두 기관 모두,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관이 약 10년 이상 소요되고, 이 두 직급간의 연봉의 차이가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연구능력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가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³⁾. 또한 기존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평균 인건비가 7,280만 원을 상회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두 기관 연구직의 연봉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은 현재 연구에 대만한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인원의 적체현상이 벌어져 인력관리 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두 기관의 인사 및 조직상의 경직성을 들 수 있겠다. 책임 운영기관으로서 두 기관은 여전히 조직이나 인사 관리에 있어 과학원장의 재량권이 부족하다. 변화하는 산림 및 수산연구 환경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인력의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부족으로 인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의 연구가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비판에 합리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국립산림과학원 세출예산변화

(단위: 백만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비	24,577	30,528	26,848	27,645	28,346	31,207	31,465	34,185	35,672
인건비	16,120	16,770	15,016	16,071	15,944	17,352	16,707	17,686	17,186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정부출연기관 관련자료(2009,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 2)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의 비정규직 구성 중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비중은 비정규직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이후 비정규직의 숫자가 2006년 506명에서 2009년에는 5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국립산림과학원은 2009년 현재 연구관과 연구사간의 연봉 차이가 2400만 원 이상이고, 산림과학원은 2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2009년 국립산림과학원, 2009년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참조)
- 4) 정부출연기관 중 철도기술연구원의 경우 8,360만 원이고 대부분 7,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산림과학원은 5,660만원, 국립수산과학원은 5,62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 2009년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참조; 국립산림과학원 정부출연기관 관련자료, 2009)

〈표 4〉 국립수산과학원 세출예산변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비	23,852	27,967	26,335	27,139	29,182	34,174	35,377	39,329	42,551
인건비	21,080	23,963	26,724	28,869	31,157	31,157	30,867	34,422	37,248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연보(2009,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의 예산 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기관 모두 자체세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두 기관 모두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 이전이나 이후에 0.5%에 그치고 있어 사업비의 증가가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선형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의 유사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이나 일본의 산림총합연구소 및 수산총합연구소에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⁵⁾. <표 3>에서 나타나듯이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인건비의 규모가 2009년 현재 사업비 대비 32.5%(17,189백만 원)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는 사업비의 증가와 더불어 인건비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규모는 46.7%에 이르고 있다. 수산과학원의 인건비는 책임운영기관 전환 이전인 2005년 31,157백만 원에서 2009년 37,248백만 원으로 19.5% 증가하였다. 인력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비정규직 인력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인력운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연도별 논문게재 수 변화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산림과학원	156	141	141	226	188	240	242	257	248
수산과학원	-	-	-	149	139	101	146	169	204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표 6〉 연도별 수탁과제 논문 수 변화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산림과학원	23	14	10	29	30	17	27	25	27
수산과학원	-	-	-	25	48	81	95	51	108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5) 한국해양연구원의 경우 2008년 현재 재정자립도는 68.3% (2009 한국해양연구원 경영공시), 2000년 독립 행정기관으로 전환한 일본산림총합연구소나 수산총합연구소는 10% 미만의 재정자립도가 2008년 현재 14% 이상으로 증가하였다(2008 산림총합연구소 연보, 2008 수산총합연구소 사업보고서).

두 기관의 기관운영 효율성, 즉 논문게재실적과 수탁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산림과학원은 책임운영기관 전환 이후 논문게재 수가 60% 증가하였고 수산과학원의 경우도 46.8%가 증가하여, 기관운영이 책임운영기관 전환이후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과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과제가 많은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에는 그 수가 많아지지 않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수탁과제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연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현재 수산과학원의 수탁과제 수는 108건으로 책임운영기관 실시 원년의 81건에 비해 27건(33.3%) 증가하였고, 2004년과 비교해 본다면 무려 332%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나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기관의 연구를 통한 다양한 지적재산권 및 특허의 출원, 그리고 대 국민 지식제공 서비스 등도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의 출원 등에서는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식의 대 국민 서비스 면에서는 지식제공이 무료로 이루어지거나 기술이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IV. 분석 틀

1. 비용-편익분석 모델

공공기관 법인화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상호배타적인(mutually-exclusive) 두 가지 시나리오이다. 현상태를 대안 1, 법인화를 대안 2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상호배타적인 시나리오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 내부수익률이나 B/C비율 등을 대안선택 기준으로 사용하면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현재가를 비교하는 것이 법인화 이전과 이후 비교가 가장 간단하다. 따라서 각 대안의 순현재가치 비교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선정할 것이다. 대안 i 의 순현재가치(NPV)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NPV_i = \sum_{t=0}^n \left[\frac{B_{i,t} - C_{i,t}}{(1+r)^t} \right],$$

6)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정책자료의 제공이나 시책건의 등은 정부기관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지만, 임업컨설팅이나 시험민원 등은 그 경제적 효과에 따라 유료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이나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정부출연기관 관련자료, 2009).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기술이전 실적은 2005년의 40건에서 2008년에는 37건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지식의 대 국민보급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2008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국립수산과학원).

여기서, $B_{i,t}$ 는 대안 i 의 t 시점의 편익, $C_{i,t}$ 는 대안 i 의 t 시점의 비용, r 은 위험조정 (risk-adjusted) 이자율, $i=1$ 인 경우 현상태(대안1), $i=2$ 인 경우 법인화(대안2) 등을 나타낸다. 투자기간은 10년으로 전제한다. 즉, $n=10$. 할인율은 평평한 이자율기간구조를 가정하여 5%로 산정한다.

2. 비용-편익 분석 구성 및 기본전제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많이 상정할수록 좀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만큼의 계산상의 어려움도 증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인화과정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자 한다. ① 법인화과정에서 인력감축이 없다. ② 인건비와 사업비를 증가시킨다. ③ 기관의 공공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가정은 법인화에 대한 반대론자의 비판을 받아들여 법인화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법인화 과정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현금흐름은 비용과 편익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비교 시나리오는 크게 현상태(대안1)과 대안2(법인화) 등 두 가지이다. 그리고 편익을 계산할 때에는, 계산의 편의상, 현상태의 편익은 0으로 상정하고, 법인화의 편익은 현상태 대비 증분(Δ)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편익은 절대금액이 아니라 증분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3. 비용 및 편익 추정

대안 1(현상태)의 현금흐름 중 비용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성된다. 대안 1의 편익은 0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순현금흐름은 -(대안1의 비용)이다. 법인화(대안2)의 현금흐름 중 비용은 인건비와 사업비 외에 법인전환비용이 추가된다. 법인전환비용에는 교육훈련비용과 법인설립비용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법인화(대안2)의 현금흐름 중 비용구성요인은 인건비, 사업비, 법인전환비용(교육훈련비용, 법인설립비용) 등이며, 구체적인 편익 구성요인은 과제수 증분, 기타사업수입 증분, 만족도 증분, 효율성 및 공공성 증분, 학술논문성과의 증분 등이다.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 변수로서 각 연구기관의 인원수를 추정해야 한다. 두 연구기관의 인원변동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인원변동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추정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10년 내에 1% 증가 혹은 1% 감소 시나리오를 상정하였고,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과거 6년간의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10년 내에 1.5% 증가 혹은 1.5% 감소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수는 10명(산림과학원) 혹은 15명(수산과학원), 이사의 평균연봉은 직원평균임금의 두 배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1

인당 인건비 초기값은 최근의 자료를 참조하여 55.4(백만원; 산림과학원) 혹은 50.65(백만원; 수산과학원)로 상정하였다. 총인건비를 추정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별로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을 다르게 책정하였다. 현상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공공부문 임금상승률 3%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법인화에 대해서는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을 5%로 상정하였다.

사업비 추정을 위해서는 사업비의 초기값과 증가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사업비 초기값은 산림과학원의 경우 2008년 사업비, 수산과학원의 경우 2009년 사업비 등으로 상정했다. 그리고 산림과학원의 경우 사업비 증가율에 대한 가정은 현상태에 대해서는 3%, 법인화에 대해서는 5% 혹은 7%로 상정하였다. 수산과학원의 사업비 증가율은 현상태 3%, 법인화 5% 등을 상정하였다.

법인전환비용은 교육훈련비와 법인설립비용으로 구성된다. 산림과학원의 경우, 교육훈련비는 최소의 경우, 3년간 총 30억(매년 10억), 최대의 경우, 4년간 총 46억(매년 12억)으로 상정하였다. 수산과학원 교육훈련비의 경우, 최소 연13억씩 3년간, 총 39억, 최대 연 15억씩 4년간, 총 60억 등을 상정하였다. 법인설립비용은 최소의 경우 인건비와 사업비 총계의 1.3%, 최대의 경우, 인건비와 사업비 총계의 12.3%로 상정하였다.

과제수증분의 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1인당 과제수의 초기값 추정이 필요하다. 산림과학원의 경우, 1인당 과제수 초기값으로 최근 2개년 평균으로서 0.38개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수행 과제수의 증가율에 대해서는 현상태의 경우 1%, 법인화의 경우, 5%와 7% 등을 상정하였다. 과제당 비용 추정은, 최소의 경우 정부출연연구소의 평균인 13.21(백만원), 최대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을 기준으로 22.55(백만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값들을 기초로 해서 법인화로 인한 총과제수 증분의 시장가치를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의 학술논문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학술논문편수 증가율에 대해서는, 현상태의 경우 국내 및 해외논문 각각 5%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법인화의 경우, 국내논문 21.1%, 해외논문 11.6% 증가율을 각각 상정하였다. 논문 편당 가치는 국내논문의 경우, 0.5(백만원), 해외논문의 경우 3(백만원)으로 상정하였다.

수산과학원의 경우, 1인당 과제수 초기값으로 2006년 기준 0.15개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증가율에 대해서 현상태 5%, 법인화 15% 내지 25% 등을 상정하였다. 과제당 가치는 13.21(백만원)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수산과학원의 1인당 논문 편수의 기준은 0.21편으로 추정하였다. 논문편수의 증가율은 현상태 3%, 법인화 15% 내지 25% 등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논문 편당 가치는 0.5(백만원)로 상정하였다. 논문 편수 및 과제 증가율의 근거는 일본 수산종합연구소의 사례로서, 법인화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기타사업비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2007년의 80(백만원)을 기준으로 상승률은 3%(현상태)와 10%(법인화)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법인화로 인한 고객만족도 증가의 시장가치는 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고객만족도 증가란 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이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공적인 연구를 지속하게 되며, 더 우수한 인력보강과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림과학원의 경우, 매년 1%p씩 증가한다고 상정했으며, 수산과학원의 경우, 고객 만족도가 매년 0.1%p 증가한다고 상정했다.

4. 기관운영 효율성 및 공익성의 가치 추정

산림의 공익성은 목재, 생물다양성보전, 국토 및 수자원함양, 경관보전, 교육 및 휴양 서비스 제공, 산촌전통문화유지, 대기정화기능,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 생태계 유지, 탄소배출감축규제로 인한 새로운 시장 형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여 추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장철수·신용광(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로서 9,082원/(가구, 월)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구수는 2009년 통계청 예측치인 16,916,966을 사용하였다.

법인화로 인해서 조직의 효율성 향상과 산림의 공익성의 시장가치 증분을 산림의 시장가치의 일정부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국립산림과학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써 국립산림과학원의 공익성은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은 시장기반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산림분야에서 새로운 공공재 개발 가능성 증가, 공공재 공급 증가 등으로 공익적 가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시장가치증분 추정을 위한 비율은 매년 0.15%p씩 증가하여 10년 내에 산림 공익 가치의 1.5%로 상정하였다.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상대가치로 추정하였다. 2005년 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최종수요)를 기준으로, 수산부문과 산림부문의 가치비율을 다음과 같다: 수산부문의 가치/산림부문의 가치 = $1,903,737/618,381 = 3.08$. 따라서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 3.08로 추정될 수 있다. 즉, (산림의 공익적 가치) * 3.08 = $1,843,677 * 3.08 = 5,675,917$ (백만원).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국립수산과학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공익성도 증가하게 된다. 수자원의 시장가치증분 추정을 위한 비율에 대한 가정은 10년 내에 산림 공익 가치의 1%라고 했을 때, 매년 0.1%p씩 증가한다고 상정하고자 한다. 산림분야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그 조직의 규모나 기능 측면에서 수산분야의 공익적

가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증가율에 대한 가정은 보수적인 예측치라고 할 수 있다.

5. 분석 틀 및 절차

본 연구는 기존의 원칙 및 이론적 논의에 치중되던 법인화 논의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의미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계량적 결과에만 법인화 여부의 정책결정을 맡기려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는 비용·편익분석의 계량적 방법으로 모델을 설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는데서 논의를 출발한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재가치와 법인화 이후 가치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량적으로 비교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논의함으로써 법인화의 정책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즉 기본 가정의 현실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을 파악하고, 법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인화 이후 조직의 목표와 역량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모델 및 분석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틀 및 절차

모델 및 가정 수립		법인화 대안 비교		정책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 수립 - 기본 가정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현재 및 법인화 이후 B/C 분석 - B/C 분석 결과 비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 분석 결과 의미 파악 - B/C 분석 가정에 대한 현실적 의미 파악

IV. 분석

1. 대안의 순편익 비교

국립산림과학원의 현상태(대안1) 순편익의 경우, <표 8>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적으로 일정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나리오의 수가 작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현상태(대안1)의 순편익은 인건비와 사업비의 증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반면, 법인화(대안2)의 순편익의 평균은 4년차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법인화의 경우, 인건비 및

사업비의 증가로 인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순편익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대안 1과 대안 2의 순편익을 비교해 보면, 최소값에 있어서는 법인화2년 후 시점부터 대안 2가 대안 1보다 편익이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최대값에 있어서는 1년 후 시점부터 대안 2가 대안 1보다 편익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안 2의 편익이 대안 1의 편익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순편익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현상태(대안1)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인화(대안1)의 경우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5년차부터 다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2년차까지는 현상태(대안1)이 순편익의 평균이 큰 반면, 3년차부터는 법인화(대안2)의 순편익의 평균이 더 크다. 이는 법인화의 편익이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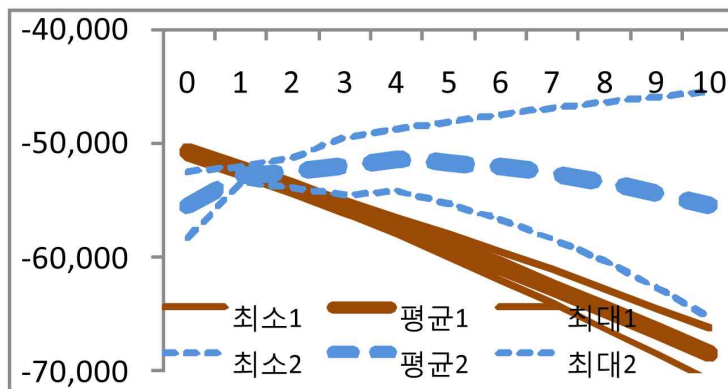
<표 8> 국립산림과학원 법인화 대안의 순편익 비교

(단위: 백만원)

시점	현상태(대안1)			법인화(대안2)		
	최소1	평균1	최대1	최소2	평균2	최대2
0	-50,861	-50,861	-50,861	-58,317	-55,420	-52,523
1	-52,559	-52,387	-52,215	-53,418	-52,749	-52,080
2	-54,314	-53,961	-53,607	-53,867	-52,557	-51,247
3	-56,130	-55,583	-55,036	-54,531	-52,001	-49,470
4	-58,007	-57,256	-56,505	-54,223	-51,486	-48,749
5	-59,948	-58,982	-58,015	-55,358	-51,721	-48,084
6	-61,956	-60,761	-59,566	-56,752	-52,112	-47,472
7	-64,033	-62,596	-61,160	-58,422	-52,668	-46,915
8	-66,180	-64,489	-62,798	-60,383	-53,396	-46,408
9	-68,401	-66,441	-64,481	-62,655	-54,303	-45,951
10	-70,698	-68,454	-66,211	-65,257	-55,398	-45,539

<그림 1> 국립산림과학원 법인화 대안의 순편익 비교

(단위: 백만원)



참고 : 대안 1(실선), 대안 2(점선)

한편, 국립수산물학원의 현상태(대안1)의 순편익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9> 및 <그림 2> 참조). 국립수산물학원에 대한 두 대안의 순편익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최소값에 있어서는 법인화 1년 후 시점부터 대안 2가 대안 1보다 편익이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최대값에 있어서는 법인화 3년 후 시점부터 대안 2가 대안 1보다 편익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안 2의 편익이 대안 1의 편익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순편익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현상태(대안1)의 경우 순편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법인화(대안2)의 경우 지속적으로 순편익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학원 현상태 시나리오의 순편익의 변동폭이 국립산림과학원에 비해서 큰 이유는 시나리오에서 상정하는 증가율이 컸기 때문이다. 국립수산물학원의 법인화(대안2)의 평균 순편익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초기의 증가속도가 후기의 증가속도보다 빠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폭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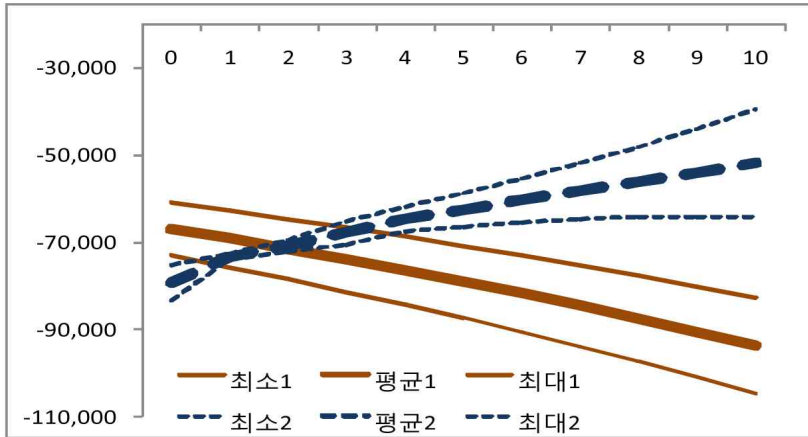
<표 9> 국립수산물학원 법인화 대안별 비교

(단위: 백만원)

시점	현상태(대안1)			법인화(대안2)		
	최소1	평균1	최대1	최소2	평균2	최대2
0	-72,992	-66,936	-60,881	-83,470	-79,355	-75,241
1	-75,652	-69,180	-62,708	-73,977	-73,328	-72,679
2	-78,413	-71,508	-64,604	-72,138	-70,850	-69,562
3	-81,279	-73,925	-66,572	-70,504	-67,822	-65,141
4	-84,255	-76,435	-68,615	-67,585	-64,786	-61,988
5	-87,345	-79,041	-70,737	-66,392	-62,580	-58,768
6	-90,552	-81,747	-72,941	-65,437	-60,436	-55,436
7	-93,883	-84,557	-75,230	-64,732	-58,332	-51,932
8	-97,341	-87,475	-77,609	-64,287	-56,234	-48,181
9	-100,933	-90,506	-80,080	-64,117	-54,101	-44,085
10	-104,662	-93,656	-82,649	-64,233	-51,877	-39,521

<그림 2> 국립수산물과학원 법인화 대안의 순편익 비교

(단위: 백만원)



참고 : 대안 1(실선), 대안 2(점선)

정리하면, 국립수산물과학원과 국립수산물과학원 모두 현상태의 순편익(실선)은 일정비율로 감소한다. 반면, 법인화의 순편익(점선)은 초기의 법인화 전환비용의 발생으로 인하여 큰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화의 순편익 현금흐름(점선)은 초기에 초기의 법인화전환비용의 발생으로 꺾인(kinked)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정기간 이후, 하락세가 완만하거나 순편익의 현금흐름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안의 NPV 비교

민감도분석으로서 할인율이 변할 때 순현재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하였다. <표 10> 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수산물과학원의 경우 할인율의 변화에 따른 대안별 순현재가치(NPV)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즉, 할인율이 증가함에 따라 순현재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통상 할인율이 증가하면 순현재가치는 감소하지만, 현금흐름이 모두 부(-)의 값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순현재가치는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할인율을 어떻게 상정하든지 간에 법인화(대안2)의 순현재가치가 현상태(대안1)의 순현재가치보다 모두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할인율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와 상관없이 법인화(대안2)가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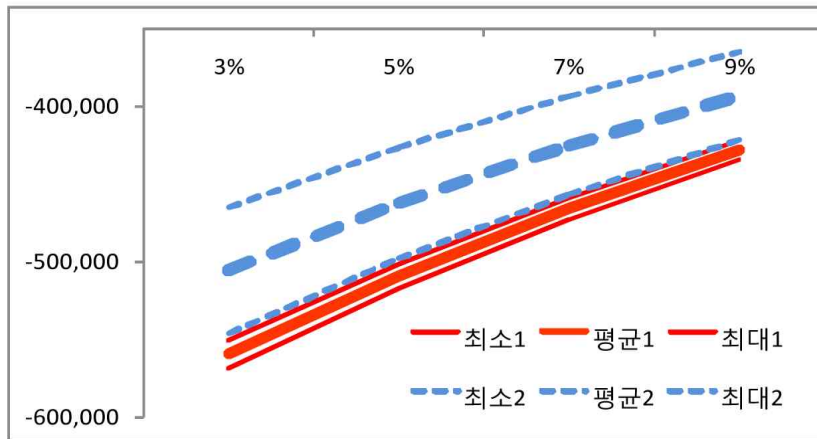
<표 10> 국립산림과학원 할인율 변화에 따른 대안별 순현재가치 추정

(단위: 백만원)

할인율	현상태(대안1)			법인화(대안2)		
	최소1	평균1	최대1	최소2	평균2	최대2
3%	-568,928	-559,751	-550,574	-546,061	-505,578	-465,095
5%	-517,390	-509,360	-501,330	-498,328	-462,602	-426,875
7%	-473,059	-465,999	-458,940	-457,235	-425,525	-393,816
9%	-434,736	-428,501	-422,266	-421,678	-393,378	-365,077

<그림 3> 국립산림과학원 할인율 변화에 따른 대안 비교

(단위: 백만원)



참고 : 대안 1(실선), 대안 2(점선)

국립수산과학원의 할인율에 따른 대안별 순현재가치 역시 <표 11>과 <그림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할인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와 같이 모든 현금흐름이 부(-)의 값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증가함에 따라 순현재가치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대안별 순현재가치를 비교해보면, 법인화(대안2)의 순현재가치가 현상태(대안1)의 순현재가치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할인율이 7%이상인 경우 법인화 순현재가치의 최소값이 현상태 순현재가치 최대값보다 약간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순현재가치의 평균의 경우 여전히 법인화 순현재가치 평균값이 현상태 순현재가치 평균값보다는 크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있어서도 법인화의 순현재가치가 현상태의 순현재가치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법인화(대안2)가 더 우세한 전략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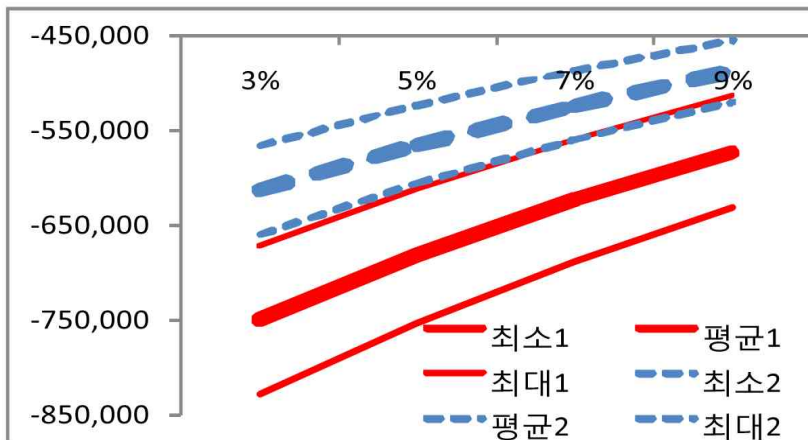
<표 11> 국립수산과학원 할인을 변화에 따른 대안별 순현재가치 추정

(단위: 백만원)

할인율	현상태(대안1)			법인화(대안2)		
	최소1	평균1	최대1	최소2	평균2	최대2
3%	-829,186	-750,571	-671,956	-660,248	-613,442	-566,635
5%	-753,622	-682,493	-611,364	-606,991	-565,712	-524,433
7%	-688,648	-623,940	-559,231	-560,923	-524,301	-487,680
9%	-632,500	-573,326	-514,153	-520,872	-488,193	-455,513

<그림 4> 국립수산과학원 할인을 변화에 따른 대안 비교

(단위: 백만원)



참고 : 대안 1(실선), 대안 2(점선)

결론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최종적인 대안의 선택은 각 대안의 순현재가치의 크기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안별 순현재가치(NPV)를 비교해 본 결과, 할인율 수준에 관계 없이 법인화(대안2)의 현재가치가 현상태(대안1)의 현재가치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국립수산물관리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모두 현상태보다는 법인화가 더 우수한 선택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국립수산물관리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연구소가 법인화 되는 경우 현재 상태로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어떤 대안이 우수한가를 비용-편익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과 같은 비용-편익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법인화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모두 추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익과 비용을 추정 내지 계산

가능하게끔 기본 가정 내지 전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가정 내지 전제는 연구의 한계점인 동시에 본 연구를 가능하게끔 했다는 점에서 양면적이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이 경제적 측면에는 장점이 있지만 한계를 인정하여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에 따른 공공성의 저해나 공무원 신분의 불안 등의 비시장가치적 비용을 감안하여 분석하였다. 즉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의 현실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① 법인화 과정에서의 인력감축 없음, ② 인건비와 사업비의 증가, ③ 기관의 공공기능의 지속적 수행 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였다. 인력감축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유는 법인화 과정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구성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협력을 얻어야 법인화의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한 이유는 법인화 이후 구성원의 사기진작, 전문가의 영입, 새로운 사업 개발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관의 공공기능의 지속적 수행을 전제한 이유는 법인화 이후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관의 내·외부에서 모두 주장하고 있고, 공공성의 증진 자체가 기관의 법인화 이유라는 측면에서 전제하였다.

시나리오별 비용과 편익의 계산과정에서 구체적인 선행연구가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주로 내부 자료에 근거해서 주로 표본평균값을 사용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주관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편익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기본 전제에서 공공기능을 지속한다고 설정했는데, 이는 법인화로 인해서 공공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한 것을 의미한다. 이 가정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며,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수 있게끔 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정 하에서 성립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법인화 논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이 두 가지 대안들은 상호배타적(mutually-exclusive)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선택되면, 다른 대안은 자동적으로 선택되지 않게 된다. 상호배타적인 대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즉, 가장 높은 순현재가치의 대안이 최선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대안별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순현재가치를 계산한 결과, 법인화(대안2)의 순현재가치가 현상태(대안1)의 순현재가치보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할인율의 크기와 상관없이 법인화가 현재의 기관운영형태보다 순현재가치가 두 기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만으로는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을 수용한 상태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모두 법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법인화 이후 인건비 5% 상승, 사업비 5% 또는 7% 상승, 교육훈련비 4년 간 총 46억원 투자, 법인 설립비용 인건비와 사업비 총계의 1.3% 또는 12.3% 등을 투자하는 경우, 수행 과제수 5% 또는 7% 상승, 국내논문 21.1% 및 해외논문 11.6% 증가, 고객만족도 매년 1% 증가하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의 법인화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는 법인화 이후 인건비 5% 상승, 사업비 5% 상승, 교육훈련비 4년 간 총 60억원 투자, 법인 설립비용 인건비와 사업비 총계의 1.3% 또는 12.3% 등을 투자하는 경우, 수행 과제수 15% 또는 25% 상승, 논문 편수 15% 또는 25% 증가, 고객만족도 매년 0.1% 증가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비용-편익분석이 정치적·사회적 제약들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보았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의 비판자들이 근원적으로 지적하듯이 비용-편익분석의 결과의 지나친 신봉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국립극장 법인화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이 법인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었듯이 법인화의 가정이 충분히 전제되었을 때는 법인화가 비용-편익의 경제적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용투자와 성과를 얻으려는 전략적 선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채기 (2005).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면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42.
- 김근세 (1998). 책임집행기관에 대한 연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2): 139-162.
- _____. (2004).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관리구조와 성과. 「한국행정연구」, 13(3): 206-236.
- 김근세·이경호. (2005). 책임운영기관의 조직문화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179-204.
- 김성준 (2002). 책임운영기관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김영찬 (2006) 한국산업의 KCSI 점수가 기업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고객만족경영연구」, 제8권 제1호, pp. 63-72.
- 김필동 (2008).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과 구조. 「충남대 사회과학연구」, 19권 여름호 : 1-30.
- 박석희 (2010). 정부기관 법인화의 행정책임성 문제 : 농림수산분야 소속기관의 사례. 「한국조직학회보」, 7(2) : 119-156.
- 박용성 (2008). 중앙행정기관의 법인화 가능성 모색.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논문집」 : 29-45.
- 박용성·임승빈·이영재 (2008).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의 효율적 조직개편 방안연구」. 행정안전부 정책연구보고서.
- 박희봉 (2007). 책임운영기관 관리운영 개선 방향.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3-253.
- 신봉기 (2007). 독일 대학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법인화법안의 문제점. 「법학논고」, 제27집 : 263-315.
- 유홍립 (2009).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방향과 전략모색. 「서울행정학회·한국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이상철·성도경·허만용·하상군 (2005). 준정부조직의 생성·변형·소멸에 관한 기초 연구: POSCO의 경제성과 정치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 55-76.
- 이성로. 2007. 국립대 법인화 ; 공교육 포기인가, 국가경쟁력 강화인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435-456.

- 이유재·이청림 (2006). 고객만족이 기업의 수익성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연구」, 제21권 제2호, pp. 85-113.
- 이종원·박석희·최종원 (2010). 산림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립산림과학원 출연기관의 적정성 고찰. 「정부와정책」, 3(1) : 83-107.
- 장철수·신용광 (2007).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환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분석, 「산림경제연구」, 15(1), 9-21.
- 조장균 (2005). 국립대학법인화와 노동관계의 변화. 「노동법학」, 20 : 201-224.
- 현진권 (2008). 공공성은 정부개입을 필요로 하는가.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국립산림과학원 (2002). “2001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_____ (2003). “2002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_____ (2004). “2003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_____ (2005). “2004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_____ (2006). “2005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_____ (2007). “2006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_____ (2008). “2007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_____ (2009). “2008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_____ (2010). “2009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 국립수산과학원 (2004). “2003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_____ (2005). “2004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_____ (2006). “2005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_____ (2007). “2006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_____ (2008). “2007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_____ (2009). “2008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_____ (2010). “2009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 행정안전부 (2002). “2001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보고서.”
 _____ (2003). “2002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보고서.”
 _____ (2004). “2003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보고서.”
 _____ (2005). “2004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보고서.”
 _____ (2006). “2005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보고서.”
 _____ (2007). “2006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보고서.”

_____ (2008). “2007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보고서.”

_____ (2009). “2008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보고서.”

_____ (2008). “우정사업 법인화 추진방안 연구”

_____ (2008). 중앙정부기능의 민간이양 추진방안

James, Oliver. (2003). *The Executive Agency Revolution in Whitehall: Public Interest versus Bureau-Shaping Perspectives*. Houndsmills: Palgrave Macmillan.

OECD. (2002). *Distributed Public Governance: Agencies, Authorities and Other Government Bodies*. Paris: OECD.

Talbot, Colin. (2004). Executive Agencies: Have They Improved Management in Government?, *Public Money and Management*. April: 104-112.

Thomas, Michael. (1996). Special Operating Agencies: Audit & Evaluation. Management Practices No. 16. Canadian Center for Management Development.

박희봉(朴熙峯):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논문: 「Citize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of Korea」, 1994),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행정문화, 조직이론, 정부개혁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저서로는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2008), 「시민참여와 거버넌스」(공저, 2009), 「지방행정 거버넌스」(공저, 2009), 논문으로는 “제17대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2009), “노무현 전대통령 장례식 집회참여, 정치적 표현인가? 문화적 표현인가?”(2010),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2010) 등이 있다. (hbpark@cau.ac.kr)

유시용(劉時庸): 미국 Cornell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를 받고(논문: 「Using Weather Derivatives to Manage Financial Risk in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 2003), 현재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변동성이 주요 연구 관심분야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내 펀드투자자의 펀드선정능력에 관한 연구”(공저, 2010), “KOSPI200 선물시장의 투자자 유형별 거래와 KOSPI200 주가지수 시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공저, 2009) 등이 있다. (sy61@cau.ac.kr)

유동상(劉東相):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 논문 「Institutions, Political Market, and Local Land Use Policy Change」로 행정학 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다. 도시 및 지역개발, 지방자치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다. 논문으로는 “도시 정치제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2009) 등이 있다. (fsu0814@hanmail.net)